

편의점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

VR로 점포 레이아웃... 시로 실시간 본사와 상담

(가상현실)

(인공지능)

CU, VR기술 활용 '진열안내서' GS25, 업무 지원 '챗봇지니' 등 4차 산업기술 접목 시스템 선배 점포 생산성·경쟁력 향상 기대



편의점 CU가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VR상품진열안내서'를 선보였다. /BGF리테일

최저임금 상승과 4차 산업기술이 유통업계에 전반적으로 접목되면서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일자리 부담을 낮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CU와 GS25가 최근 인공지능(AI), 가상현실기술(VR)을 접목한 점포 운영 시스템을 접목했다.

CU는 기존 책자 형식의 상품진열안내

서를 VR 기술로 구현한 최첨단 프로그램 'VR진열안내서'를 선보였다.

앞서 CU는 계절, 날씨 등 환경적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의점 특성에 맞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연 2회(춘하, 추동)에 걸쳐 효율적인 진열 및 레이아웃을 안내하는 상품진열안내서를 책자 형태로 배부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VR진열안내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절적 특성, 최신 소비트렌드에 맞춰 가상 현실 점포에 구현된 진열과 레이아웃을 탭만으로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책자 형태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단순 이미지 전달에서 나아가 비디오, 사운드 등 시청각 자료와 연동되어 정보 전달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도시락 냉장고, 스낵 진열대, 음료 냉장고 등 주요 집기마다 표시된 포

인트를 클릭하면 진열 상품의 특징이나 해당 카테고리 최근 매출 순위, 중점 운영 상품 등 다양한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석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해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고도화된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4차산업에 발맞춰 CU만의 노하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맹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의 적용과 시스템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해 KT와 '미래형 점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번째 결과물로 지난 1월 편의점 점주의 업무를 지원하는 '챗봇지니'를 공개했다.

챗봇지니는 근무자가 점포에 신규 도입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지원형 서비스다.

GS25와 KT는 점포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FAQ(자주 묻는 질문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향후 근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확도가 향상될 예정이다.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영주 점포 관리 측면의 생산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1면 '한국은 택배공화국...'서 계속

단가 반등요인 많아 하반기 기대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택배가 이처럼 우리 생활속 깊숙히 자리잡은 가운데 택배단가 인상 가능성이 연초부터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형사의 경우 지난해 택배단가는 박스당 2248원 정도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떨어지기만 했던 택배단가가 반등할 요인이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택배업체의 최대 숙원인 단가인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형 고객사로부터 올해 일부 요금 인상에 성공했고, 최근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단가 정상화 방침이 맞물린다면 하반기에 단가가 반등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더욱 격화되는 경쟁과 택배사들에게 일감을 주는 대형 유통사들의 절대적 지위로 단가 인상이 업체나 택배기사의 요구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줄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등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가 13~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MCE 2018에서 다양한 무풍냉방·친환경 공조 솔루션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 바이오인식 및 물리보안 분야의 글로벌 업체 지케이테크(ZKTeco)가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48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5%를 기록,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KT&G 권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 '핏(Fiit)'이 유통망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장한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8조... 패션 등 전용상품 강화 총력

빈폴키즈·질바이질스튜디오 등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선택 고경비 감소돼 수익성 개선



럭키슈에프가 내놓은 온라인 전용 상품 화보. /코오롱FnC

유통업계가 온라인 전용 상품을 기획하며 온라인 쇼핑족을 흡수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보다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고경비를 줄여줄 뿐 아니라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최근 몇년 간 8조원대를 기록,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조6991억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23.8%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소비자들 국내에서 1/4를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트렌드가 이어지자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쇼핑 사업 영역을 늘리는 추세다.

가장 돋보이는 카테고리는 '패션'이다.

최근 몇년 간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선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매액이 급증했지만 이들은 배송의 편리함,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

반면 최근 패션 카테고리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집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같은 브랜드 여도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유통하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제시된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다. 업체가 같은 상품을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비싸게, 온라인몰에서는 저렴하게 내놓게 되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비가 온라인몰에만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매트렌드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의 MD 구성을 다르게 기획하기 시작,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점포에 각자 다른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구매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온라인 전용' 상품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패션부문은 지난해 9월 빈폴키즈의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만 유통을 한정했다. 또 LF는 2016년 질바이질스튜디오와 일꼬르소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바꿨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경비가 감소하고 수요가 없어도 매장 구성을 위해 갖춰야 했던 제품 생산비용이 절감돼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온라인 전용 라인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의 빈플레이디스는 4번째 온라인 전용 상품 '라임 빈폴'을 새롭게 선보였다. 코오롱FnC의 럭키슈에프와 커스텀멜로우도 이색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檢, 오늘 MB 소환... '다스 실소유주'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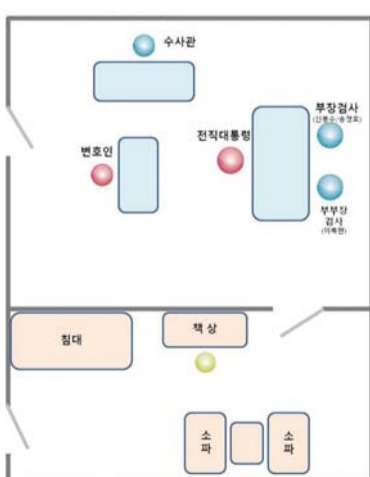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17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MB, 중앙지검 조사실 배치도〉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 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

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명박 전 청와체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월하게 기소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 기관 사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입증된 순간,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수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범종 기자 joker@